

1967~1974년 동독의 통일 포기과 이민족론

이동기*

국문요약

1967년부터 동독의 지도자들은 양독간 대결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고 서독 사회 내부에 정치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독일통일 전망을 포기했다. 사통당 주요 지도자들은 사회주의를 독점자본주의와 통일시키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독 지도부의 독일통일 포기과 민족 노선 변경은 한편으로는 서독 기민련 정부의 완강한 태도에 대한 실망 탓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독 사민당의 ‘우경화’에 대한 비관적 현실 인식의 결과였다. 사민당과의 동맹, 즉 서독과 동독 사이에 노동계급 통일 대오를 결성함으로써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오직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강화만이 독일 민족의 의미 있는 발전으로 여겨졌다. 동독의 이민족론은 1969년 서독 사민당-자민당 연정의 ‘일민족 이국가’ 주장에 맞선 것이었다. 사통당 민족 이론가들에 따르면, 서독에는 부르주아 민족이 잔존하고 있으며,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민족이 형성되었다. 국가의 계급 성격과 계급투쟁의 결과가 민족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 새로운 민족관의 전제였다. 서독과 동독은 “질적으로 유형이 다른 민족”으로 간주되었다. 서독에 대한 동독의 거리두기와 민족 정책 차이의 강화는 양독 모두에게 망상적 통일논의나 민족주의 담론을 벗어나 현실적 평화정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동독은 서독과의 관계와 국제 정치 무대에서 실질적인 국가 인정과 체제 존중을 완전히 확보했다. 하지만 동독은 동시에 평화정치의 역설적 성과로 내부적으로는 붕괴의 도정에 들어섰다. 동독에서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은 오히려 통일 후였다.

주제어: 통일포기, 이민족론, 이국가론, 독일통일, 사회주의 민족

* 강원대 대학원 평화학과 교수. leedongki@kangwon.ac.kr

I. 머리말

“폐허를 딛고 일어나/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너에게 헌신할 거야/독일, 통일 조국이며/오랜 역경을 반드시 이겨내자/단결하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지/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태양이 독일을 비추리/태양이 독일을 비추리.” 분단 시기(1949-1990) 독일민주공화국(이하 동독으로 부름) 국가(國歌) ‘폐허를 딛고 일어나(Auferstanden aus Ruinen)’의 1절이다(Eisler 1949). 1949년 9월 사통당(독일사회주의통일당 SED) 정치국의 요청으로 요한네스 R. 베커(Johannes R. Becher)가 작사했고 한스 아이슬러(Hanns Eisler)가 작곡한 ‘폐허를 딛고 일어나’는 11월 초 동독 정부에 의해 ‘독일 국가’로 발표되었다(Amos 1997, 22-58; Kurzke 1990, 151-159). 2절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행복과 평화를 맞이할 수 있을 거야/독일, 우리 조국이며/전 세계가 평화를 갈망하지/여러 민족들에게 손을 내밀자/우리가 형제로서 단결한다면/우리는 민중의 적을 물리칠 수 있지/평화가 빛나도록 하자/다시는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독일 분단이 끝을 갖춘 1950년 2월 동독 정부는 그것을 ‘독일’ 국가가 아니라 ‘동독 국가’로 공식 확정했다. 그것은 독일인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 부를 수 있는 ‘평화의 노래’였기에 “충분히 투쟁적이지는 못하다”는 비판도 받았다(Amos 1997, 69-90). 하지만 -또는 바로 그랬기에- 냉전 시기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國歌)들과는 달리 그것은 주민들에게 꽤 사랑받았다. 국가 제창은 동독 주민들의 삶에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1973년 동독 정부는 공식 행사에서 국가를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연주만 하도록 결정했다. 동독 국가 1절에 ‘독일, 통일 조국이며(Deutschland, einig Vaterland)’라는 가사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작사가 베커와 작곡가 아이슬러의 명성과 무게를 가변이 볼 수 없어 국가를 교체하지는 못했다. 고심 끝에 동독 정부는 1973년 가사를 부르지 않고 곡 연주만 함께 듣는 방식으로 국가를 유지했다. 이제 기괴한 일이 펼쳐진다. 그렇게 자랑하던 국가(國歌)를 부르지 못한 채 국가행사에서 모두 멍하니 듣고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동독 주민들의 일부는 간혹 입을 오물거렸다. 하지만 대다수 동독 지배 엘리트들과 사통당 당원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통일 조국’은 자신들과는 관계없다는 생각을 다지며 입을 굳게 닫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동독 정부는 서

독과의 통일을 포기했고 ‘하나의 독일 민족’의 지속도 부정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부터 한반도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정부도 유사한 일을 벌이고 있다. 조선 정부는 기왕의 오랜 통일 강령을 포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포했다. 이윽고 조선 정부는 통일을 담당하거나 선전하는 기관을 없애는 한편, ‘민족’과 ‘통일’을 연상하는 용어와 표현을 삭제하고 있다. 조선 국가(國歌)에는 한반도 전체를 뜻하는 ‘삼천리’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삭제되었다. 그 대신 ‘이 세상’이란 단어가 들어섰다. 그 외에도 분단 시기 동독이 통일을 포기하면서 보였던 여러 실천 현상이 조선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 조선에서 1971년 동독의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이다(Sturm 2024).

한반도 남북관계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조선의 이(二)국가론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형성에 도움이 될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이때 분단 시기 양독의 경험은 그 논의의 근간과 인식 지평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¹⁾ 하지만 이 글은 분단 시기 동독이 현재의 조선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포기한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는 데 만족한다. 동독의 통일포기는 단순히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이국가론에 그치지 않고 이(二)민족론의 발전으로 귀결되었다. 그렇기에 이 글은 동독 이민족론의 내용을 밝히면서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다룬다. 그것을 통해 이 글은 조선의 통일포기를 이해할 수 있는 비교사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글은 동독과 북한의 통일포기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긴 하지만 맥락과 역사, 상황과 행위자의 근본적 차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동독의 역사 경험이 더 정확히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전제다.

1) 동독의 통일포기와 서독의 대응이 현재 조선의 통일포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논의에 어떤 함의를 지닐지에 대해서는 필자가 조만간 별도의 논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II. 동독의 통일 규정과 정책

1. 동서독 헌법의 통일 규정

1949년 건국 무렵 독일연방공화국(이하 서독)의 기본법 서문은 “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함부르크, 헤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쉬레스비히홀슈타인, 뷔르템베르크 바덴, 뷔르템베르크호헨졸렌 주에 거주하는 독일 민족(Volk)은 국가에 과도기적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 그 독일 민족은 참여권을 갖지 못한 저쪽 독일인들을 대신해 행동했다. 독일 민족 전체는 여전히 자유로운 자결권을 통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기본법 제정 당시 동독은 국가로 아직 건설되기 전이었지만 서독 주의 주민들은 이미 동독 지역의 독일인들을 대신함을 밝혔고 그 지역의 자유와 독일통일을 의무로 규정했다. 기본법은 향후 독일통일을 염두에 둔 임시법이였다. 기본법에 따라 서독의 국가기관은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녔다(Roos 1994; Röss 1995; Röss 1979). 하지만 독일 주민들의 자유와 자유로운 결정 외에 구체적인 통일 방법과 과정에 대해 기본법은 여지를 많이 열었다(Grewe 1999). 그렇기에 독일민주공화국(이하 동독)과의 통일과 관련된 기본법 내용은 1990년까지 바뀌지 않을 수 있었다.

분단 초기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단독 대표원칙’을 표방했다. 서독만이 전 독일과 독일 민족(Volk: 인민)을 유일하게 대표한다는 원칙이였다. 기본법 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이 기본법은 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광역 베를린,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쉬레스비히-홀슈타인,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헨졸렌의 영토에서 우선 적용된다. 독일의 다른 지역은 가입 후 발효된다.” 한국 헌법과 비교해서 흥미로운 것은 서독은 기본법 적용 범위를 서독 지역으로 제한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적시된 주가 아닌 경우에는 연방공화국(서독)에 가입한 후에 기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베를린은 동베를린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 조항에 따라 1957년 잘란트주가 연방공화국에 가입했다. 또 1990년 동독의 5개 주가 연방공화국에 가입한 방식을 통해 독일의 재통일이 이루어졌다(Rossi 2010, 13-16).

서독에 비해 동독 헌법은 통일 규정과 민족 정책에서 상당히 부침을 겪었다. 1949년 동독(독일민주공화국) 건국 헌법에는 독일통일을 목표로 삼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1949년 헌법 제1조는 “독일은 나눌 수 없는 민주공화국이며, 독일의 주들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했다. 1949년까지는 아직 마르크스-레닌주의식 중앙통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주’를 언급했지만 얼마 뒤 동독에서는 5개 주(Land)가 14개의 ‘군(Bezirk)’으로 해체되었다. 동독은 서독과 함께 통일을 달성할 것임을 줄곧 주장했고 통일 강령을 적극 선전했다(Amos 2006; Lemke 2001). 아울러 헌법 1조 4항은 “하나의 독일 국적만이 존재한다”라고 규정해 분단이 곧 극복될 것임을 알렸다. 어쨌든 1968년 동독 정부가 헌법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2. 동독의 통일정책

1954/55년이 되자 소련을 필두로 동독은 지금 당장 통일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국가론’을 제기했다. 독일은 하나의 민족이기에 서독과 동독은 궁극적으로는 통일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두 개의 국가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전제 아래에서 서로 통일을 위한 전망과 방법을 모색하자는 주장이었다. 서독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동독 지도부는 1956년 말부터 1966년 말까지 서독 정부에 20여 차례나 계속 ‘국가연합(Konföderation)’을 통일안으로 제안했다. 서독 정부는 그것을 서독 사회 교란 술책으로 보고 동독과의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²⁾

애초 동독 지도부의 국가연합안은 서독 정부의 자유 총선거를 통한 통일 방안에 대항하는 성격을 가졌다. 동독 정부는 독일 전역의 자유 총선거는 국가연합이라는 과도기의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단계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1957년 1월 말 울브리히트는 그 대신 국가연합의 중앙기구로 ‘전독일 평의회’(Gesamtdeutscher Rat)를 제안했다. 그것은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의 기능을 떠맡는 것이었다. 같은 수의 양독 대표자들로 구성될 ‘전독일 평의회’는 관세와 외환동맹, 국유 산업과 단일화폐 및 단일 발권 은행 그리고 단일 통신과 수송제도를 위한 조정위원회 등의 단일한 행정제도의

2) 이하 동독의 국가연합 통일안에 대해서는 이동기(2009a)를 참조하라. 분단 시기 독일의 국가연합안에 대해서는 Lee(2010)와 이동기(2016)를 참조하라.

도입을 준비할 수 있다. 또 그에 따르면, 국민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독일 자유선거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전독일평의회였다.

전독일평의회 외에 독일 전체에 적용될 공동의 군사와 외교 정책으로 동독 정부가 제안한 것은 군사동맹 탈피와 중립주의였다. 동독의 국가연합안에 담긴 중립주의는 현상적으로는 1950년대 서독 중립주의자들의 중립 독일 구상과 유사했다(이동기 2009b). 하지만 동독에 따르면, 군사블록 체제 간 대결의 책임은 미국과 서독 정부에 있는 것이었고 나토 해체야말로 유럽 평화의 관건이었다. 그들이 보기에, 독일 중립은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세력들이 제거될 때만 보장될 수 있었다. 그 논리에 따르면, 국가연합 논의는 서독의 권력 교체 후어나 가능했다. 바로 이 점에서 사통당은 동요를 보였다. 사통당은 한편으로는 서독에게 국가연합을 통일안으로 제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서독 정부를 대화와 협상의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독이 ‘민주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국가연합 협상은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심지어 서독의 지배자들이 국가연합 제안을 받아들이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들이 보기에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서독의 민주 세력들과 힘을 합쳐 그것을 위해 투쟁하고 그곳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때로 서독의 권력 교체를 대화의 전제조건 항목에서 빼고 그것을 다만 국가연합의 첫 과정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사통당 지도부는 동서독 국가연합을 위해서는 군사동맹 체제로부터의 탈피, 핵무기의 생산과 유치 금지, 4대 전승국 군대의 독일로부터의 점진적 철수 그리고 재파시즘 정책의 포기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서독 내 정치 세력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때 서독 내 정치 세력의 근본적 변화란 무엇보다 일차적으로는 ‘파시즘 세력의 권력 상실’을 의미했고 궁극적으로는 ‘노동계급의 혁명화’를 함의하는 것이었다. 그런 한 그것은 애초부터 서독 정부와의 협상의 여지를 없애고 서독 내부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에 불과했다.

결국, 사통당의 국가연합안은 계급투쟁의 도구로서의 성격 때문에 그때 오히려 양독 간 진지한 대화와 건설적 협상을 방해했고 또 상당 기간 서독에서 국가연합을 공산주의자들의 정치 책략 정도로 간주하게 만들며 국가연합안의 정치적 함의를 축소 내지 변질시켰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동독 지

도부가 국가연합을 제안하면서 독-독 간 정치협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며 단지 음험한 정치 책략으로만 접근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서독 ‘노동계급의 혁명화’라는 비현실적 정세 파악과 ‘사회주의의 최종적 승리’라는 망상적 미래상은 -역설적이게도- 사통당 지도부가 국가연합 제안 시 오히려 그들 나름의 다양한 구상을 갖도록 만들기도 했다.

요컨대, 1950년대 후반부터 사통당은 서독의 정치변화에 대한 망상적 전망과 낙관적 기대에 기초해 다양한 양독 간 교류를 적극 주창했다. 이를테면, 그들은 그 이전 서독 중립주의자들의 국가연합 구상들(이동기 2009c)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양독 간 경제협력의 강화에 특히 ‘진지한’ 관심을 두었다. 동독의 국가연합안이 지닌 의의는 서독의 다양한 정치 세력들에게 동서독 관계의 협력과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논의를 유인했다는 점이다. 비록 동독의 국가연합안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세력은 극히 드물었지만,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서독의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고유한 국가연합안을 발전시켰다. 그렇지만 동독 정치지도자들의 망상과 낙관의 시간은 곧 끝났다.

Ⅲ. 1967-1971 “모든 통일 망상과 실천의 종결”³⁾

망상은 쉽게 떠나기 어렵다. 혼란이 불가피했다. 1966년 4월 21일 사통당 창당 2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당 제1서기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는 여전히 국가연합을 통일안으로 발표했다(Ulbricht 1966). 그는 독일국가연합 구성과 통일 구현 과정에 대해 과거와 마찬가지로 상세히 견해를 밝혔다. 앞선 대부분의 제안과 좀 다른 점은 국가연합의 틀에서 경제협력이 가능함을 적극 부각한 것이었다. 그는 동독이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에 결속되었지만, 진영을 넘어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를 잘 활용하는 서독 경제계와 협력해서 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으로 동독은 국가연합을 통해 서독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새 시장, 특히 산업 설비 시설 수출 시장을 개척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Ulbricht 1966, 58). 정치와 외교, 문

3) 이하 3장과 4장의 일부 내용은 저자의 독일어 저작 Lee(2010, 159-174)를 축약했다.

화 영역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브리히트는 상당히 진지했다. 그는 과학기술혁명의 시대를 맞아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울브리히트는 서독 정부에 자신의 국가연합안이 충분히 토론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고자 용을 썼다. 이때 그는 서독의 지배층을 축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확인해주었다.

그리하여 1966년 내내 동독 정치지도자들은 여러 번 공적인 언급과 저술을 통해 국가연합을 통한 독일통일을 선전했다. 1966년 발간된 8권의 사통당 공식 당사 『독일노동운동사』(*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마지막 권 끝에서도 국가연합 통일안이 미래 구상으로 제시되었다. 그 해 여러 인터뷰와 연설에서 울브리히트는 반복해서 그 통일 강령을 알렸다(Instytut für Marxismus-Leninismus beim ZK der SED 1966 Bd. 8, 408; Häber 1966, 13-48).⁴⁾ 그것은 1967년 연두교서까지 이어졌다.

1967년 연두교서로 실린 ‘독일국가연합 도정을 위한 10개조 강령’에서 울브리히트는 국가연합 구현을 위한 양독간 협상 조건 창출 보다는 서독의 동독 인정과 유럽안보회의 틀에서 서독과 동독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같은 요구를 더 앞세웠다(Bundesarchiv 1966/67, 232) 그 마지막 국가연합 제안에는 이미 동독 지도부의 민족 구상이 바뀌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 없지 않았다. 이를테면, 유럽 차원의 평화공존을 위한 양독간 협상이 부각되면서 사회주의와 독점자본주의 지배 체제가 서로 한 국가로 통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언급이 들어 있었다.

정밀히 보면, 계급대결의 상황으로 인해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가 한 국가 안에서 병존 불가능함을 언급하기 시작한 때는 이미 1966년 9월 중순에 열린 사통당 중앙위원회 13/14차 회의에서였다(Mittag 1966, 10-12, 20-22;

4) 그 외 1966년 5월부터 9월까지 나온 동독 정치 지도부의 연설과 발표는 다음과 같다. 21. Mai 1966: Aus der Rede des Mitglieds des Politbüros des ZK der SED, Hager, auf dem 1. Parteitag der SED-Westberlin; 1. Juni 1966: Schreiben des Staatsratsvorsitzenden Ulbricht an Professor Jaspers; 16. Juni 1966: Aus der Rede des Staatsratsvorsitzenden Ulbricht auf der Freundschaftskundgebung in Ost-Berlin anlässlich des Besuchs der Partei- und Regierungsdelegation der Ungarischen Volksrepublik; 1. September 1966: Erklärung des Ministers Winzer vor der Volkskammer der DDR; 22. September 1966: Interview des Staatsratsvorsitzenden Ulbricht für die Zeitung Asahi Shimbun,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IV/12* (Bundesarchiv 1966/67, 794, 821, 915, 1274-1275와 1365).

Grüneberg 1966, 33-34; Koch 1985, 44-58). 당시 사통당 지도부는 양독 간 통일은 서독의 민주주의 변혁 여부에 달려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⁵⁾ 요컨대, 1966년 가을부터 사통당 지도부 내부에는 입장 동요와 혼란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국가연합을 통일 강령으로 선전하고 제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양독 간 통일의 불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67년 연두교서에서 “모호한 표현”(Koch 1985, 63)으로 두 길을 다 열어 둔 것과는 달리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책 전환이 당 내부에서 강조되었고 곧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사통당 최고 권력자 울브히리트는 서독 정부가 제 제안에 어떤 긍정 반응도 없음을 확인하고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⁶⁾ 1967년 1월 9일 ‘사회주의대혁명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회의와 1월 12일 『독일노동운동사』 공동집필진 회의에서 연이어 “통일 수다”가 아무 쓸모 없고 “민족정책에서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aumann and Trümpler 1991, 110-114).⁷⁾ 통일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직접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구현할 수 있는 과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되었다. “망상적 재통일 선전”(Naumann and Trümpler 1991, 116) 대신에 한편으로는 독일 양국의 공존과 동등한 지위의 관계 정립이 요구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독 사회와 정치 체제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물론 뒤의 요구는 이제 더 이상 국가연합이나 독일통일과 연계된 전제조건이 아니었다. 1967년 1월 18일 사통당 중앙위와 군지도부 선전선동 담당관 연석회의 같은 여러 당 내부 회의와 집회에서 핵심 지도자들은 정책 변화를 설명했다(Koch 1985, 64-65).⁸⁾ 특히 당 중앙위 국제관계 비서 헤

5) 22. September 1966: Interview des Staatsratsvorsitzenden Ulbricht für die Zeitung Asahi Shimbun; 13. Oktober 1966: Aus der Erklärung des Staatsratsvorsitzenden Ulbricht vor der Volkskammer der DDR; 4. November 1966: Aus der Rede des Staatsratsvorsitzenden Ulbricht anlässlich des 20. Jahrestages der Wiedereröffnung der Technischen Universität Dresden, in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IV/12* (Bundesarchiv 1966/67, 1365, 1525 und 1646)

6) 5. Aus den einführenden Bemerkungen Walter Ulbrichts auf der Beratung des Komitees zur Vorbereitung des 50. Jahrestages der Großen Sozialistischen Oktoberrevolution am 9. Januar 1967(Naumann and Trümpler 1991, 113)

7) 그 외 6. Aus den Bemerkungen Walter Ulbrichts auf der Sitzung des Autorenkollektivs der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am 12. Januar 1967 (Naumann and Trümpler 1991, 114-117)을 참조하라.

르만 악센(Hermann Axen)과 선전선동부 부장 베르너 람베르츠(Werner Lamberz)는 새로 부상하고 있는 지도부의 일원이었다. 그들이 정책 변화 설명을 주로 담당했다.

그들은 국가연합 또는 독일 재통일 주장이 더 이상 의미 없음을 양독간 대결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고 서독 사회 내부에 정치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설명했고 사통당 민족 정책의 근본 변화를 정당화했다. 그런 조건에서는 더 이상 통일을 입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독에는 “국가연합이나 재통일을 위한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Naumann and Trümpler 1991, 120).⁹⁾ 헤르만 악센은 여전히 “국가연합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인식의 동요와 혼란을 드러냈지만,¹⁰⁾ 통일 내지 통일 주장은 이제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그런 새로운 인식의 배경에는 서독에 그것을 위한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놓여 있음을 드러냈다. 오랫동안 사통당 정치국에서 ‘민족문제’를 책임졌던 알베르트 노르텐(Albert Norden)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1967년 1월 20일 민족전선 민족평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지금까지의 “통일 망상”을 청산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 민족의 문제는 시종 계급 문제입니다. 저쪽에서는 대자본가들의 부패가 만연하지만, 이곳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이 지식인과 여타 근로자들과 동맹을 맺고 통치합니다. 불과 물의 결합을 허용하는 자연의 법칙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독에서 우리가 성취한 역사의 법칙은 독일 노동 계급과 대부르주아지 사이에는 이익이 일치하지 않고 단지 서로 건널 수 없는 틈새 만이 존재하기에 독일 노동계급 스스로 민족을 구성하도록 명령합니다(Norden 1967a, 32-33).

-
- 8) 7. Aus den Notizen über die Beratung im Zentralkomitee mit den Sekretären für Agitation/Propaganda der Bezirksleitungen der SED am 18. Januar 1967(Naumann and Trümpler 1991, 117-122). 1967년 1월과 2월 울브리히트의 연이은 발언과 개입에 대해서는 Naumann and Trümpler(1991, 22-24)을 참조하라.
- 9) 울브리히트는 1967년 1월 9일 이미 “서독에는 우리와 함께 통일을 이룰만한 파트너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5. Aus den einführenden Bemerkungen Walter Ulbrichts auf der Beratung des Komitees zur Vorbereitung des 50. Jahrestages der Großen Sozialistischen Oktoberrevolution am 9. Januar 1967(Naumann and Trümpler 1991, 112).
- 10) 악센은 여전히 통일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보였다. 그는 “단지 하나의 통일만이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연합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Naumann and Trümpler 1991, 120). 동독 역사가 클라우스-우베 코흐는 그것을 국가연합 강령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라고 해석했지만(Koch 1985, 66) 그렇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통일 문제에 대한 동요와 혼란의 징표였다.

노르텐은 양 독일 국가가 함께 나아가기는커녕 이성적으로 서로 병립하지도 못하는데 통일을 운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덧붙였다(Norden 1967b, 39). 1965년 이미 저서 『민족과 우리』(Die Nation und wir) (Norden 1965)를 통해 사통당 내 최고 민족 이론가로 부상한 노르텐은 “사회주의를 독점자본주의와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심지어 “평화와 사회주의, 민족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단호했다. 그는 민족정책의 결론에 대해 “동독 사회주의 건설이 실천적인 독일 민족정책”이라고 요약했다(Norden 1967a, 32-33).

마찬가지로 1967년 4월 제7차 당대회를 위한 중앙위원회 보고에서 당 지도부는 차후에 국가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을 만드는 것마저도 이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Parteitag der SED 1967b, 261). 당대회에서 올브리히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독의 전방위적 강화는 서독 독점자본의 계획이 가능성이 없음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사회체제를 가진 동독의 매력을 높이고 군사주의, 네오나치즘과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민주 세력을 격려하고 강화할 것입니다(Parteitag der SED 1967a, 66).

올브리히트는 이제 독일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다. 1967년 7월 중순 올브리히트는 통일은 단지 서독에서 근본적인 사회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Naumann and Trümpler 1991, 29). 동독 지도부는 양 독일 국가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단순히 국가연합안만 뒤로 물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동독 고유의 발전과 그것에 대한 집단적 자의식과 정체성을 부각함으로써 통일 관념 자체를 포기했다. 물론, 이때도 아직 하나의 독일 민족이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받지 않았다.

1966/67년 동독 지도부의 민족정책 노선 변경은 자신들의 통일 제안에 대해 서독 정부가 계속 논의를 거부하고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완강한 태도 때문이었다. 1958년과 1962년 사이에 잠시 서독 총리실에서는 오스트리아-해결책과 글로프케 방안¹¹⁾이 논의되었지만, 서독 정부는 사통당의

11) 1957년 1월 11일 서독 총리실 대변인 펠릭스 폰 에카르트(Felix von Eckardt)는 단

국가연합 통일안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두지 않았다. 게다가 1966년 말 사민당이 대연정에 참여했지만, 서독 정부의 통일 대화 거부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1966년 12월 13일 정부 선언에서 신임 연방총리 쿠르트 게오르크 키싱어(Kurt Georg Kiesinger)는 단독대표권을 계속 고집했고 동독 국가의 어떤 인정도 단호히 거부했다. 물론, 그는 선언에서 동독에게 폭력 사용 포기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했고 동독 총리와의 서신 교환에서 긴장완화 의지를 드러냈다(Bange 2005, 466-471).¹²⁾ 연방정부의 통일 대화 거부로 인해 사통당 지도부는 양독 간 협상 부재의 책임을 전적으로 서독 정부에 돌리며 서독 정부의 단독대표권 주장 유지를 자신들의 민족 정책 전환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그런데 1966/67년의 정책 전환에는 서독 정부의 완강한 태도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 1966년 사민당과의 연설자 교류 협상 실패가 그것이다. 1966년 동독 사통당과 서독 사민당은 기왕의 적대를 해소할 요량으로 서로 연설자를 교환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사실 사통당 지도부는 국가연합을 비롯한 서방정책의 일차적 선전 대상으로 사민당원들을 겨냥했다. 당시 일부 사통당 간부들은 서독 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서독 정치권에서 “눈에 보이게 일정한 지지를 확보했다”라고 분석했다(Dengler 1966).¹³⁾ 하지만 그 지지는 너무 미약했다. 민족중립주의 정치 세력만이 사통당의 국가연합안을 옹호했을 뿐이었다. 사통당 지도부는 제 구상대로 국가연합을 주장하

계적 통일 방안을 아데나위에게 올렸다. 그것은 소련 정부와 협상해 동독이 인도적 문제 경감에 나선다면 동독에게 자율성과 주권을 인정해주는 ‘오스트리아 해법’으로 발전했다. 1959년 서독 총리실 차관 한스 글로브케(Hans Globke)는 내부 논의 끝에 독일통일안을 작성했다. 그것은 5년 동안의 현상 유지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주민들이 자유선거를 통해 통일을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가졌다. 그 사이 기간에는 베를린을 자유도시로 두는 것을 포함했다. 국민투표에서 독일 각기 양 지역의 과반수가 통일에 반대표를 던지면 독일은 무기한 분단 상태를 유지한다. 반면, 양독 모두에서 과반수가 통일에 찬성할 경우, 독일 정부는 향후 군사동맹 소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구상이 공식 제안이나 정책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둘 다 동독을 국제법적 독자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거나 포함했고 그것은 기존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ACDP, NL Globke 01-070-025/2).

- 12) 13. Dezember 1966: Bundeskanzler Kiesinger: Regierungserklärung, in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Bd. I*(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1968, 7-27).
- 13) 16. Juni 1966: Erklärung des Gesandten Kegel auf der Tagung des Rates für gesamtdeutsche Fragen der DDR, in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IV/12* (Bundesarchiv 1966/67, 921)

고 따를 준비가 된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이 서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통당은 오랫동안 사민당이야말로 자신들과 함께 독일통일을 이룰 파트너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1966년 당시 사민당은 사통당과 거리를 두면서 서독 의회민주주의의 정치 체제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명료히 밝혔다. 오히려 사통당 지도부는 동독 내부에서 서독과의 대화와 협상, 즉 ‘민족 대화’를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한 것을 알아 차렸다(Lemke 1999, 85; Naumann and Trümpler 1991, 17-18). 그런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사통당 지도부는 이데올로기 도그마를 극복하고 대화에 나설 의지가 없었기에 ‘연설자 교류’ 계획을 뒤로 물렸다. 사통당 지도부는 “안도했다”(Axen 1996, 286).

사민당과 사통당 사이의 ‘민족 대화’ 논의는 성과 없이 끝났고, 사민당은 곧이어 1966년 12월 1일 기민련과의 대연정에 참여했다. 이에 사통당 지도부에는 국가연합을 통한 통일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심이 급격히 증폭하기 시작했다. 사민당과 기민련/기사련의 공동내각 결성은 사통당 지도자들이 보기에 어떤 우호적 정치 변화도 아니었고 서독 정치 전체가 우파로 넘어가는 이행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Ebert 1967, 131). 위에서 언급한, “서독에는 국가연합이든 재통일이든 어떤 파트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민당과의 동맹, 즉 노동계급 통일 대오 결성에 실패한 좌절의 표현이었다(Norden 1969, 237; Ulbricht 1966b, 8, 11-12). 프리드리히 에베르트가 1967년 말 잘 요약했듯이, 이제 서독은 “국가연합을 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국가였다(Ebert 1967, 99). 서독의 ‘국가연합의 능력과 자격 부재’는 동독 지도부의 민족정책 전환을 위한 개념적 징검다리였다.

사실 국가연합을 할 ‘능력’도 ‘자격’도 없기는 동독의 사통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였다. 국가연합을 서독 체제의 변화와 연결하는 한 그들은 국가연합의 근간 사상인 연방주의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셈이기 때문이다. 국가연합에서는 회원국의 자율성 존중과 공존의 원칙이 중요하지만, 동독 사통당 지도부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채 국가연합을 주장했다. 국가연합은 결국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양독간 ‘통일논의’ 자체를 무덤에 끌고 가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 당시에는 불명확했다. 동독 지도부에게도 그랬고 서독의 국가연합 지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IV. 1971년 ‘사회주의 독일 민족’ 테제의 등장과 이민족론의 확립

1968년 4월 6일 인민투표로 통과된 동독의 새 헌법은 독일의 민족 분열 극복을 여전히 장기 목표로 삼았다(Verfassung der DDR; Zieger 1988, 118-120).¹⁴⁾ 그것은 당연히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이었다. 사통당 지도부는 여전히 독일 민족의 지속 존재를 언급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과 1970년 초 그들의 공식 선언과 연설에는 통일안 제안을 커녕 통일이란 용어 자체가 사라졌다. 1969년 울브리히트의 신년사, 1969년 12월 12/13일 사통당 중앙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의 그의 연설, 그리고 1970년 3월 19일 동독 총리 빌리 슈토프의 선언 등은 모두 민족 정책 전환을 반복해서 밝혔다.¹⁵⁾ 그들은 통일 전망이나 강령 대신에 계속 동독과 서독의 하나의 민족적 틀에서 공존하기에는 서로 사회가 너무 다르고 더 이상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당시에는 아직 전체 독일에게 동독은 모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항상 언급되었다. 국제법적 상호 인정과 대등한 자격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덧붙여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사태로 인한 교훈도 무시할 수 없었다. 동독 지도부는 동독에서 사회주의를 강화하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동맹을 통해 그 성과를 수호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밝혔다(Koch 1985, 125). 1968년 8월 30일 사통당 선전선동부 부장 알베르트 노르텐은 민족전선 민족평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주의 독일민주공화국과 제국주의 연방공화국 사이의 통일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민중이 라인강과 루르강 자락을 통치할 때야 독일은 통일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결론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즉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던 독일통일에 대한 환상과 실천은 모두 종식되어야 합니다.¹⁶⁾

14) 새 헌법은 인민투표에서 유권자 천2백2십만 명 중에서 94,49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 그 인민투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McKay(1998, 45)를 참조하라.

15) 15. Aus dem Referat Walter Ulbrichts „Grundlegende Aufgaben im Jahre 1970“ auf der 12. Tagung des ZK der SED, 12./13. Dezember 1969; 21. Aus der Erklärung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DDR, Willi Stoph, am 19. März 1970 in Erfurt (Naumann and Trümpler 1991, 146-148, 167-168).

“모든 결론을 끝까지 밀어붙이”려면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다. 1970년 상반기 사통당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더욱 “밀어붙여” 민족관의 변화, 즉 새로운 과격한 민족 개념을 선보였다. 그것은 양 독일 사회의 대결이나 두 국가의 통일 불가능성을 넘는 주장이었다. 사통당 정치가들은 ‘단일한 독일 민족의 지속 존재’를 의문시켰고 1968년 헌법에서 규정된 “독일 민족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용어 대신 “사회주의 독일 국민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¹⁷⁾ 민족 문제에 대한 “더 진전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연구와 숙고가 이어졌다. 사통당 정치국의 지시로 당 산하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에 쿠르트 하거(Kurt Hager)를 중심으로 한 연구단이 꾸려졌다. 그들은 1970년 3월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Schmidt 1996, 8). 그것은 ‘사회주의 독일 국민국가’ 규정을 넘어 새로운 민족 이론을 제시했다. ‘사회주의 독일 국민국가’에서 사회주의 독일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것은 부르주아 독일 민족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¹⁸⁾ 이로써 사통당의 이(二)민족론이 등장했다.

이민족론이 느닷없이 탄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1960년대 초 동독의 일부 학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민족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주의 민족으로의 심대한 변화”에 주목했다(Säuberlich 1984, 91-98). 1961/62년 사회주의에서의 민족 문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이미 동독의 독자적인 민족 형성 가능성이 주목되었다. 선구자는 칼 폴락(Karl Polak)과 에른스트 호프만(Ernst Hofmann)과 쿠르트 하거 등이었다. 그들은 양 독일에서 서로 다른 발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독에서는 부르주아 민족이 사회주의 민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주목했다(Naumann and Trümpler 1991, 73). 그동안 다른 맥락에서 언급되는 부르주아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 간의 차이 논의가 독일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었다(Kleines Politisches Wörterbuch 1967, 427; Wörterbuch der marxistisch-leninistischen Soziologie. 1969, 305; Lutz 1972, 23-25). 오랫동안 동서독의 체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독일 민

16) SAPMO-BArch, NL 217/68.

17) 24. Aus den Ausführungen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DDR, Willi Stoph, zum Abschluß der Gespräche mit Willy Brandt am 21. Mai 1970 in Kassel; 26. Aus dem Bericht des Politbüros an die 13. Tagung des ZK der SED am 9. und 10. Juni 1970; 27. Aus der Rede Walter Ulbrichts auf der 13. Tagung des ZK der SED am 9. und 10. Juni 1970(Naumann and Trümpler 1991, 176, 182, 187)

18) 사통당의 이민족론에 대해서는 Ludz(1971, 17-27); Hacker(1987, 43-64); McKay(1998, 67-105); Schmidt(1996, 6-16)을 참조하라.

족으로 연결하는 고리로 노동계급이 언급되었다. 1971년에는 이제 그와 같은 노동계급을 통한 독일 민족의 결속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단일한 독일 노동계급의 존재와 그것을 통한 민족 결속과 연대를 논하기에는 양 독일 사회의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는 것이 사통당 지도자들의 평가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울브리히트의 역할이다. 이민족론의 탄생에 울브리히트가 수행한 역할은 겉으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다음의 두 가지였다. 먼저, 동독의 공식 문서를 따라 읽다 보면 누구보다도 울브리히트가 그 전환의 주창자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오랜 신념이었던 일민족-이국가론을 집어 던지고 이민족-이국가론을 앞장서서 주장한 듯하다. 그는 1969년 말 민족론의 전환을 언급했고 1970년 초부터는 “사회주의 민족의 형성”을 계속 언급했다(Schmidt 1996, 7-8; Naumann and Trümpler 1991, 7-72; Hacker 1987, 53, 57). 요컨대, 울브리히트는 이미 1969년 12월 12일 사통당 중앙위원회 12차 회의에서 민족관의 변화를 드러냈고, 1970년 1월 19일 해외언론과의 대담에서 “이른바 아직도 단일하다고 하는 민족”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동독은 “사회주의 독일 민족국가”로 규정하지만, 서독은 주권이 제한된 “자본주의 나토 국가”라고 불렀다.¹⁹⁾ 1970년 그는 독일 민족의 지속을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1970년 12월 17일 사통당 창당 25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회의의 연설에서 다시 “동독은 사회주의 독일 민족국가이고 그것을 통해 사회주의 민족이 형성되고 있으며 반면, 서독은 이전의 부르주아 민족의 찌꺼기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²⁰⁾ 이것은 동독 지도 정치가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독일의 이민족 존재를 언급한 것이다.²¹⁾

19) 15. Aus dem Referat Walter Ulbrichts „Grundlegende Aufgaben im Jahre 1970“ auf der 12. Tagung des ZK der SED, 12./13. Dezember 1969; 20. Aus dem Protokoll der Pressekonferenz des Vorsitzenden des Staatsrates der DDR und Ersten Sekretärs des ZK der SED, Walter Ulbricht, am 19. Januar 1970(Naumann and Trümpler 1991, 147, 166). “사회주의 민족국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울브리히트였다. Jürgen Hofmann(1983, 63).

20) 30. Aus dem Referat Walter Ulbrichts auf der Sitzung der Kommission zur Vorbereitung des 25. Jahrestages der SED am 17. Dezember 1970(Naumann and Trümpler 1991, 197).

21) 동독 법학자 출신으로 서독으로 이주한 볼프강 자이페르트에 따르면, 이미 1970년에 동독 맑스주의 경제학자 위르겐 쿠친스키(Jürgen Kuczynski)가 두 개 독일 민족의 존재를 언급했고 그것이 그 후의 이민족론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Seiffert 1982, 170).

동독에서 이민족론 등장에는 서독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당시 동독은 서독 신생 정부의 새로운 민족 담론과 동서독 관계 인식에 맞대응해야 했다(McKay 1998, 48-50; Zieger 1988, 123-134; Schmidt 1996, 13-14; Naumann and Trümpler 1991, 39-70; Hacker 1987, 51-52). 빌리 브란트 총리는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 사이의 “내독간 특수 관계”라는 규정을 통해 동서독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 올브리히트는 “사실상의 두 국가 인정”과 민족통일 전망의 지속이라는 서독 사민당/자민당 연정의 민족 구상에 맞서 대안적인 민족 이해와 동서독 관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 한 이민족론 정립에서 올브리히트의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다(Axen 1996, 306-307).

하지만 올브리히트의 역할을 과장할 수는 없다. 동독의 이민족론은 1969년부터 시작되어 1971년에 완결된 동독 내 권력 교체를 배경으로 갖고 있다(Stadt 1996, 687-700; Stelkens 1997, 503-533). 새로운 권력자로 부상한 에리히 호네커와 그의 추종자들과는 달리 올브리히트는 서독의 정권 변화를 독일 분단 상황의 큰 변화로 해석했다. 올브리히트가 보기에 그것은 “민주주의 대중투쟁” 또는 “노동계급의 혁명화” 결과였다. 그렇기에 그는 다시 사통당과 사민당의 협력을 겨냥하는 통일 공세를 펼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숙고했다.²²⁾

당시 분명 올브리히트는 국가연합 같은 과거 통일안을 다시 끄집어 올릴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타 정치국원들과 갈등을 가질 것을 우려했다. 사실 이미 브레즈네프는 그즈음 이미 호네커를 올브리히트의 후계자로 점찍어 둔 상태로 기회만 보고 있었다. 그렇기에 민족정책에서 다시 후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호네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련 지도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는 것이었다. 소련 지도부는 서독과 소련이 협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동독이 서독과 협상에

22) 올브리히트의 사민당/자민당 연정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서방정책 시도에 대해서는 SAPMO-BArch, DY 30/3295, Bl. 12 und 370-377; SAPMO-BArch, DY 30/J IV 2/202/122; Konzeption für Verhandlungen mit der westdeutschen Koalitionsregierung Brandt/Scheel, in SAPMO-BArch, DY 30, J IV 2/202/346을 참조하라. Kaiser(1997, 324-369); Stelkens(1997, 520-530); Stadt(1996, 687-689); Przybylski(1991, 283-284, 293-299) 사통당 내부에서 사민당/자민당 연정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가 존재했음에 대한 선구적 분석은 Hans-Joachim Spanger(1982, 150-161).

자꾸 나서는 것을 교란 요소로 보았다. 호네커와 그의 심복들은 브레즈네프와 올브리히트 사이를 벌리는 데 성공했고 브레즈네프의 올브리히트에 대한 거부감을 조장해 올브리히트의 실각을 이끌었다(Kaiser 1997, 371-391; Stelkens 1997, 528).²³⁾

1969/70년 올브리히트가 재차 사민당과의 대화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의 오랜 혁명관 때문이었다. 비록 1966/67년 사민당에 대한 실망으로 “통일 망상”을 포기할 것을 앞장서 주장했지만, 그는 ‘사회주의 통일 독일’의 전망을 완전히 포기하기가 어려웠다(Kaiser 1997, 348; Stelkens 1997, 524-525, 528; Weinert 1995, 85). 문서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올브리히트의 오랜 비서였던 볼프강 베르거(Wolfgang Berger)와 동독 외부부의 관료 지프리트 보크(Siegfried Bock), 슈타지 해외 정보 책임자 마르쿠스 볼프(Markus Wolf)는 한결같이 당시 올브리히트가 다시 국가연합 통일안을 갖고 동서독 간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Berger 1991, 13; Wolf 255; Kaiser 1997, 368). 올브리히트는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기초한 동서독 국가연합을 통해 서독 경제를 따라잡는 것에 관심이 컸다(Stelkens 1997, 529).

그렇기에 올브리히트의 민족 구상을 단순히 서독 체제의 동요를 노린 정치 선전이나 전략적 음모로만 보기는 어렵다. 1966년에 서독 정치 현실에 실망해 통일 강령을 거두어들인 것에 진정성이 있는 바로 그만큼 1969/70년 서독에서 사민당 정권의 등장에 자극받아 다시 옛 통일 강령에 잠시 집착했던 것도 상당히 진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올브리히트는 소련 지도부의 반대와 정치국 내부의 권력 지지 기반 부족으로 인해 옛 민족 정책 또는 통일 구상으로 회귀할 수 없다고 보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민족 정책 전환 흐름의 앞자리에 서고자 했다.

이미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진 올브리히트는 새로운 권력자로 부상하던 호네커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동독의 사회주의 강화였다. 1969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정치국 내부의 권력 투쟁은 1971년 5월 3일 제16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호네커가 당 제1서기로 선출됨으로써 종결되었다. 신임 제1서기는 1971년 6월 제8차 당대회에서 드디어 새로운 민족 구상을 제 이름으로 선

23) Protokoll der Unterredung zwischen Breschnew und Honecker am 28. Juli 1970, in SAPMO-BArch, DY 30 J IV A/158.

언할 수 있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여전히 부르주아 민족이 존재하며 민족 문제는 부르주아지와 근로 대중 사이의 화해할 수 없는 계급 모순에 의해 규정된다. (...) 그것과 반대로 독일민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사회주의 민족이 형성되고 있다.²⁴⁾

제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명사나 형용사로 ‘독일’을 뜻하는 용어들이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수의 지도자를 빼고는 이런 민족 정책 전환이 낫설었다. 당원이나 주민들 대부분에게도 그랬지만 당 관료들, 심지어 일부 중앙위원회 위원들에게 그 전환은 매우 당혹스러웠다(Naumann and Trümpler 1991, 56, 79-81; Seiffert 1982, 171-173). 그렇기에 그 후 3년 동안 이론적 세련화 작업과 사상 교육이 필요했다. 헤르만 악센과 알베르트 노르텐 외에도 특히 알프레트 코징(Alfred Kosing)과 발터 슈미트(Walter Schmidt) 같은 당의 이론가들이 이민족론의 학문적 정비와 세련화 및 정당화 작업을 맡았다(Axen 1973; Norden 1973; Kosing 1975a; Kosing 1975b; Kosing 1976; Kosing and Schmidt 1974; Kosing 1979; Schmidt 1975; Schmidt 1980).

그들은 동독에서 사회주의 민족의 형성과 자본주의 독일 민족과의 격리를 민족(Nation)과 민족체(Nationalität)를 구분하면서 정당화했다. 그들은 민족 형성에서 종족적 요소들, 즉 민족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고 민족은 사회적 토대와 내용에 의해 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계급적 성격의 차이와 계급투쟁이 민족의 차이를 낳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실 같은 시기 서독에서도 이미 일부 지식인과 학자들은 분단 독일에서 점차 ‘이민족화’(Bi-Nationalisierung)를 주장했다(Niethammer 1999, 74-169; Schweigler 1973; Kitzmüller, Kuby and Niethammer 1973a, 1973B). 그들은 각기 경험적 조사와 발견에 기초해 서독과 동독에서 서로 다른 국가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들은 사회경제 체제의 차이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화의 인지와 해석, 경험과 공유의 차이가 낳은 행동이나 가치나

24) Bericht des Zentralkomitees an den VIII. Parteitag der SED(Parteitag des SED. 1971. 56)

합의를 통한 집단적 자기 인식의 차이에 기초해 서독 주민과 동독 주민들은 이미 하나의 단일한 독일 민족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서로 다른 독자적인 집단적 유사 민족이 형성 중임을 부각했다.

반면 동독의 이민족론 주창자들은 역사적 발전 단계의 차이가 낳은 결과로서 이민족을 내세웠다. 그들은 역사 합법칙성에 따라 민족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역사적 유형”을 지닌다고 주장하면서 서독과 동독은 각기 서로 구분되는 민족 유형을 가졌다고 결론을 내렸다(Kosing 1975a, 242; Kosing 1975b, 179). 그들은 민족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사회구성과 관련한 사회의 합법칙적 발전과 구조”로 이해했다. 그와 같은 역사 목적론 또는 역사철학적 민족 이론은 호네커 제1서기의 주장, 즉 “우리는 서독에 비해 이미 역사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Kosing 1975b, 1227)라는 규정에 조응했다.

그들이 내세운 민족과 민족체의 구분이 이론적으로 성립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현실의 변화와 연결 짓지 못했다. 즉 실제 동독 주민들이 동독 지도부와 같은 식의 독자 동독 민족의식이나 집단적 정치 정체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독일의 두 국가와 주민의 긴밀한 역사적 연루와 사회적 인적 결속을 완전히 부정하며 체제의 정치적 성격과 사회경제적 내용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규정으로 민족 이해를 채우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그들은 동독의 독자 발전 정도와 동독 주민들의 집단정체성을 과잉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억압과 경제 복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에 눈을 감았다. 동독 주민들의 지배체제에 대한 거리두기와 사회경제적 불만은 서독과의 단일 민족 지향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Seiffert 1982, 178-179; Reuter 1991, 154-168; Schmidt 1996, 30-32).

1970년대 후반 이민족론이 자리를 잡자 동독의 민족 이론가들은 장차 서독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민족이 탄생하면 하나의 단일한 사회주의 독일 민족이 다시 탄생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다. 그들은 “현재의 조건에서 보면 긍정도 부정도 어렵”고 “역사의 구체적인 전체 상황에 달렸다”라고 답했다(Kosing 1976, 306; Schmidt 1980, 88). 그들이 보기에 현재 그것에 대해 추론하는 것은 선부를 뿐이었다. 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서 “가능성”이 아니라 다만 “현실적인 것”을 다루는 데 집중

하겠다고 맺었다. 물론 그 “현실적인 것”은 그들의 주장이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경로를 열었다.

V. 맺는말

1967년 울브리히트를 위시한 사통당 지도자들은 국가연합 또는 독일 재통일 주장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해 통일 강령을 뒤로 물렸다. 그들이 보기에 양독간 대결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고 서독 사회 내부에 정치변화의 가능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사통당 주요 지도자들은 사회주의를 독점자본주의와 통일시키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독 지도부의 민족정책 노선 변경은 한편으로는 서독 기민련 정부의 완강한 태도에 대한 실망 탓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독 사민당의 ‘우경화’에 대한 비판적 현실 인식의 결과였다. 사통당 지도자들은 서독 정치변화의 불가능성에 직면해 ‘사회주의 통일독일’이라는 오랜 혁명적 망상을 거두지 않을 수 없었다. 사통당은 이제 서독의 국가연합 능력과 자격을 부정했다. 그들은 서독에는 “국가연합이든 재통일이든 어떤 파트너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당시 상황을 요약했다. 사민당과의 동맹, 즉 서독과 동독 사이에 노동계급 통일 대오를 결성함으로써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오직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강화만이 독일 민족의 의미 있는 발전으로 여겨졌다.

그 정책 전환 과정에서 울브리히트의 실각과 호네커의 등장도 깊이 연루되었다. 1969년 서독 사민당의 집권은 동독 사통당의 상황을 다시 요동치게 했다. ‘사회주의 통일독일’의 혁명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 울브리히트는 잠시 뒤를 돌아보며 주저했지만, 새로운 정치권력자로 등장한 호네커와 그의 동료들은 단호했다. 그들은 ‘망상적 통일 강령’을 포기하고 ‘현실적 민족정책’이 필요했다.

1968년 독일통일 포기도 그렇지만 1970/71년부터 등장한 이민족론은 사통당 당원들과 동독 주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사통당은 상당 기간 이론의 심화와 선전 강화가 필요했다. 이민족론은 1969년 서독 사민당-자민당 연정의 ‘일민족 이국가’ 주장에 맞선 것이었다. 사통당 민족 이론가들에 따르

면, 서독에는 여전히 부르주아 민족이 잔존하고 있으며,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민족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역사의 질적 발전 차이였다. 한 국가의 계급 성격과 계급투쟁의 결과가 민족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 새로운 민족관의 전제였다. 서독과 동독은 “질적으로 유형이 다른 민족”으로 간주되었다. 동독이 오스트리아와 통일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동독은 오스트리아와 다른 민족이었다. 마찬가지로 동독은 서독과 통일할 이유가 없을 만큼 양독은 서로 다른 민족이었다. 1971년부터 1975년까지 모든 국가 기관과 공적 활동 부문에서 ‘독일’과 ‘민족’을 지우는 대대적인 정리 작업이 진행되었다. 1974년 헌법은 1968년 헌법과 달리 ‘독일’을 아예 지우고 동독을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당과 국가 내부의 통일 관련 기구들도 모두 철폐되었다. 서독과의 관계는 외국과의 ‘외교관계’였기에 상주대표부를 ‘대사관’으로 바꿀 것과 ‘동독 국적의 인정’을 계속 요구했다.

당시 동독 지도부와 이론가들의 격리 정책과 이민족론은 서독 정부, 특히 빌리 브란트 총리가 말한 양 독일 국가 주민들 사이에 깊이 깔린 ‘독일 민족의 결속감’과 ‘일상적 삶을 통해 항상 등장하는 공동 경험’ 확인과 충돌했다(Ludz 1972, 27). 물론, 1971년 사통당의 “통일 망상과 실천”의 완전 폐기가 그 자체로 양독 국가의 협력과 접근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또는 반대로 촉진했는지를 단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일시적인 충격과 원칙적인 민족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료한 거리두기와 민족 정책 차이의 강화가 양독 모두에게 망상적 통일논의나 민족주의 담론을 벗어나 현실적 평화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든 기반이었다는 역설이다(Naumann and Trümpler 1991, 66).

적대 진영에 속한 양 독일 국가의 긴장완화와 교류 협력 관계 발전을 민족이니 통일 같은 개념이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용어와 접근을 통해 구현할 필요가 생겼다. 서독은 ‘실용적 동방정책’, 동독은 ‘현실적 서방정책’을 통해 새로운 틀에서 ‘접근’했다. 서독 정부는 실천적으로 동독 민족정책에 조응해 모든 통일논의의 유보로 응했고 동시에 명목적으로는 ‘접근’과 협력의 궁극 목적이 독일통일임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다. 동독은 국제법적 국가 인정을 협상의 초기가 아니라 협력의 결과로 달성하고자 미를 줄 알았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동서독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양측은 “민족 정책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그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지는 않았다. 화해 협력의 발전과 통일논의의 유보라는 특별한 양독 관계의 발전은 198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동독은 서독과의 관계와 국제 정치 무대에서 실질적인 국가 인정과 체제 존중을 완전히 확보했지만 동시에 화해 협력 정치의 성과로 내부적으로 붕괴의 도정에 들어섰다.

1980년대 후반 동독 지도부의 망상이나 국제적 인정(1987년 호네커 총리의 본 방문)과는 달리 동독에서는 독자 정치 정체성이나 동독 민족의식이 형성되지 못했다. 오히려 1988/89년 동독 주민들이 거리와 지역에서 점차 눈빛으로 소통하고 말을 터면서 마음을 열자 비로소 새로운 정치의식과 집단적 지향이 발원했다. 한편으로는 서독으로의 탈출 열망이 커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에 대한 저항이 조직되었다. 둘은 애초 서로 충돌했다. 앞의 흐름이 개인적 해결책이자 하나의 단일한 독일 민족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것이라면, 그것에 맞서 “우리는 남는다, 나갈 놈들은 지배자들이야!”라고 외쳤던 잔존파들은 반체제 운동을 고양함으로써 동독 주민들의 집단적인 정치적 사회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바로 후자를 통해서 비로소 동독에서 ‘새로운 동독 민족 형성’의 흐름이 만들어졌다. 그것이야말로 -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1970년에서 1974년 사통당 지도자들이 꿈꾸었던 ‘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민족’의 초기 모습이었다.

물론, 그것은 곧장 -그리고 잠시- 전통적인 단일 독일 민족 지향에 의해 압도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통일 후 동독 주민들의 실망과 결합해 동독정체성의 근간이 되었다. 동독 지배자들이 1970년부터 망상했던 일이 다른 방식으로 등장한 셈이다. 통일 후 비로소 ‘동독 민족’이 탄생했다는 평가는 과도하지만, 동독 주민들의 집단정체성이 상당 기간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고양 국면을 맞이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1989년과 1990년, 2015년과 2024년 동독 주민들의 정치 선택과 집단 결집과정은 1970/71-1974년 동독 정부의 이민족론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서독과 동독 주민들의 집단 결속과 격리 여부 문제는 연장전의 후반전에 들어간 듯하다. 역사는 쉬운 승부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동기은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평화학과 교수. 주로 평화 이론과 사상, 평화교육과 과거사정리, 냉전사와 평화사를 연구하고 있다.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부교수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냉전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단독 저서로 *Option oder Illusion?: Die Idee einer nationalen Konföder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1949-1990* (Berlin, 2010) (선택 가능한 길인가 망상인가: 1949-1990년 분단 독일의 국가연합안), 『비밀과 역설: 10개의 키워드로 읽는 독일통일과 평화』(아카넷, 2020), 『현대사 몽타주: 발견과 전복의 역사』(돌베개, 2018), 『20세기 평화텍스트 15선』(아카넷, 2013) 등이 있다.

참고문헌

1. 일차사료

1) 미발간 사료

- Stiftung Archiv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en der DDR im Bundesarchiv (SAPMO)

SAPMO-BArch, NL 217/68

SAPMO-BArch, DY 30/3295

SAPMO-BArch, DY 30/J IV 2/202/122

SAPMO-BArch, DY 30, J IV 2/202/346

SAPMO-BArch, DY 30 J IV A/158

- Archiv für Christlich-Demokratische Politik

ACDP, NL Globke 01-070-025/2

“Globke-Plan”. ACDP, NL Globke 01-070-025/2.(<https://www.konrad-adenauer.de/seite/geheimplan-fuer-die-wiedervereinigung/> 2024년 4월 20일 최종 열람).

2) 사료집

Bundesarchiv. Hg. 1966/67. *Dokumente zur Deutschlandpolitik IV/12*. Bonn.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Hg. 1968.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Bd. 1. Bonn.

3) 당대 기록과 발간물

Axen, Hermann. 1973. *Zur 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Nation in der DDR*. Berlin.

Axen, Hermann. 1996. *Ich war ein Diener der Partei. Autobiographische*

Gespräche mit Harald Neubert. Berlin.

Dengler, Gerhard. 1966. “Die Spaltung Deutschlands und der Weg zur Wiedervereinigung. Rede des Vizepräsidenten des Nationalrats der Nationalen Front Dr. Gerhard Dengler auf einer internationalen Pressekonferenz am 20. April 1966 in Berlin”, Bundesarchiv Koblenz, B 136/6779.

Ebert, Friedrich. 1967. “Der Weg zur Lösung der nationalen Frage”, in *Zwei deutsche Staaten. Die nationale Politik der DDR. Mit Beiträgen von Albert Norden, Hermann Matern und Friedrich Ebert und einer Dokumentation.* Wien.

Eisler, Hanns. 1949. *National-Hymn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Leipzig.

Grüneberg, Gerhard. *Bericht des Politbüros an die 14. Tagung des Zentralkomitees der SED: Diskussionsrede auf der 14. Tagung der ZK der SED, 15.–17. Dezember 1966.* Berlin.

Kosing, Alfred and Schmidt, Walter. 1974. “Zur Herausbildung der sozialistischen Nation in der DDR”. in *Einheit* 29. H. 2. pp. 179–188.

Kosing, Alfred. 1975a. “Theoretische Probleme der 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Nation in der DDR”. in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23 H. 2. pp. 237–261.

Kosing, Alfred. 1975b. “Nation und Nationalität in der DDR”. in *Deutschland Archiv* 8. pp. 1221–1228.

Kosing, Alfred. 1976. *Nat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Studie zur historisch-materialistischen Theorie der Nation.* Berlin.

Kosing, Alfred. 1979. “Geburt und Gedeihen der sozialistischen deutschen Nation”. in *Einheit* 34. pp. 1068–1075.

Mittag, Günter. 1966. *Aus dem Bericht des Politbüros an die 13. Tagung des Zentralkomitees der SED 15.–17. September 1966.* Berlin.

Naumann, Gerhard and Trümpler, Eckhard Hg. 1991. *Der Flop mit der DDR-Nation 1971. Zwischen Abschied von der Idee der Konföderation*

und Illusion von der Herausbildung einer sozialistischen deutschen Nation. Berlin.

Norden, Albert. 1973. “Zwei deutsche Nationalstaaten”, in *Deutschland Archiv* 5 (1973). pp. 416-417.

Norden, Albert. 1969. “Ruf an Westdeutschlands Arbeiterklasse”. in Institut für Marxismus-Leninismus beim ZK der SED Hg. *In Aktion für das sozialistische Vaterland – Ausgewählte Aufsätze und Reden 1964–1969.* Berlin.

Norden, Albert. 1967a. *Wir sind dabei – Eine neue Initiative zur Stärkung der DDR. Rede von Prof. Albert Norden auf der erweiterten Tagung des Präsidiums des Nationalrates am 20. Januar 1967 in Torgau und andere Materialien zur neuen Initiative der Nationalen Front.* Berlin.

Norden, Albert. 1967b. “Die nationale Politik der DDR und die europäische Sicherheit”. in *Zwei deutsche Staaten. Die nationale Politik der DDR. Mit Beiträgen von Albert Norden, Hermann Matern und Friedrich Ebert und einer Dokumentation.* Wien.

Norden, Albert. 1965. *Die Nation und wir.* Berlin.

Parteitag der SED. 1967a. *Protokoll der Verhandlungen des VII. Parteitages der SED 17. bis 22. April 1967 in der Werner-Seelenbinder-Halle zu Berlin, Bd. I: 1. bis 3. Beratungstag* Berlin: Dietz.

Parteitag der SED. 1967b. *Protokoll der Verhandlungen des VII. Parteitages der SED 17. bis 22. April 1967 in der Werner-Seelenbinder-Halle zu Berlin, Bd. IV: Beschlüsse und Dokumente.* Berlin: Dietz.

Parteitag des SED. 1971. *Protokoll der Verhandlungen des VIII. Parteitages der SED, 15. bis 19. Juni 1971 in der Werner-Seelenbinder-Halle zu Berlin, Bd. I: 1. bis 3. Beratungstag.* Berlin: Dietz.

Schmidt, Walter. 1975. “Nationalismus im Klassenkampf unserer Zeit”. in *Einheit* 30. H. 2. pp. 196-198.

Schmidt, Walter. 1980. *Nation und deutsche Geschichte in der bürgerlichen Ideologie der BRD.* Berlin.

- Ulbricht, Walter. 1966a. *Der Weg zum künftigen Vaterland der Deutschen, Festansprache zum 20. Jahrestag der Gründung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am 21. April 1966 in der Berliner Dynamo-Sporthalle*. Berlin: Dietz
- Ulbricht, Walter. 1966b. *Der Offene Brief des ZK der SED und die Antwort der SPD – Referat auf der 12. Tagung des ZK der SED am 27./28. April 1966*. Berlin.
- Verfassung der DDR vom 6. April 1968*. Berlin.

2. 연구 문헌

1) 국내 문헌

- 이동기. 2008. 「분단 시기(1949-1989) 동독과 서독 간 대화와 협상 -남북한 대화 평가를 위한 관점들과 관련하여-, 『사립』 30, pp. 71~97.
- 이동기. 2009a. 「1950년대 후반 동독 사통당의 국가연합통일안. 『서양사론』 102. pp. 285~317.
- 이동기. 2009b. 「‘경계인’의 시간들: 분단 독일 초기(1949-1956) 국가연합 통일안의 등장, 『역사학보』 202. pp. 333~380.
- 이동기. 2009c. 「독일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통일과 평화』 1권 2호. pp. 162~198.
- 이동기. 2016. 「국가연합과 평화체제: 분단 독일의 국가연합안 개관. 이병천 · 구갑우 · 윤홍식 엮음,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사회평론. pp. 293~323.

2) 외국 문헌

- Amos, Heke. 1997. *Auferstanden aus Ruinen...: die Nationalhymne der DDR 1949 – 1990*. Berlin: Dietz.

- Amos, Heike. 2006. *Die Entstehung der Verfassung in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 DDR 1946-1949*. Darstellung und Dokumentation. Münster. Berlin: LIT Verlag.
- Amos, Heike. 2015. *Die SED-Deutschlandpolitik 1961 bis 1989. Ziele, Aktivitäten und Konflikt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Bange, Oliver. 2005. “Kiesingers Ost- und Deutschlandpolitik von 1966–1969”. in Günter Buchstab, Philipp Gassert and Peter Thaddäus Lang Hg. *Kurt Georg Kiesinger 1904–1988. Von Ebingen ins Kanzleramt*. Hg. im Auftrag der Konrad-Adenauer-Stiftung e. V. Freiburg/Basel/Wien.
- Berger, Wolfgang. 1991. “Als Ulbricht an Breschnew vorbeiregierte”. in *Neues Deutschland*, 23./24. März 1991.
- Grewe, Wilhelm. 1999. “Deutschlandvertrag”. Werner Weidenfeld and Karl-Rudolf Korte H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49–1989–1999*. Frankfurt a.M.: Campus.
- Häber, Herbert. 1966. “Fragen – Widersprüche – Wege”. in Staatssekretariat für gesamtdeutsche Fragen Hg. *Wohin? Fragen, Widersprüche, Wege: Gedanken über eine demokratische Zukunft der Bundesrepublik*. Berlin: Dietz.
- Hacker, Jens. 1987. “SED und nationale Frage”, in Ilse Spittmann Hg. *Die SED in Geschichte und Gegenwart*. Köln.
- Hofmann, Jürgen. 1983. *Studien zur 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deutschen Nation und zur nationalen Politik der SED*, Diss. Phil. Berlin.
- Hoffrichter, Arne. 2019. “Einheitsrhetorik und Teilungspolitik in West und Ost - Zur Rechtfertigung der deutschen Teilung im Prozess der doppelten Staatsgründung”. *Deutschland Archiv*, 20.9.2019(Link: www.bpb.de/297414)
- Institut für Marxismus-Leninismus beim ZK der SED. Hrsg. 1966.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in acht Bänden*. Berlin: Dietz.
- Kaiser, Monika. 1997. *Machtwechsel von Ulbricht zu Honecker. Funktionsmechanismen der SED-Diktatur in Konfliktsituationen 1962*

- bis 1972. Berlin: Akademie Verlag.
- Kitzmüller, Erich and Kuby, Heinz and Niethammer, Lutz. 1973a. “Der Wandel der nationalen Frag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APuZ* B 33/1973. pp. 3–31.
- Kitzmüller, Erich and Kuby, Heinz and Niethammer, Lutz. 1973b. in *APuZ* B 34/1973. pp. 3–31.
- Kleines Politisches Wörterbuch*. 1967. Berlin.
- Koch, Klaus-Uwe. 1985. *Das Problem der Nation in der Strategie und Taktik der SED in der zweiten Hälfte der sechziger Jahre*. Dissertation Akademie für Gesellschaftswissenschaften beim ZK der SED, Institut für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Forschungsbereich Sozialistische Nation und Geschichte. Berlin.
- Kurzke, Hermann. 1990. *Hymnen und Lieder der Deutschen*. Mainz: Dieterich.
- Lee, Dong-Ki. 2010. *Option oder Illusion? Die Idee einer nationalen Konföder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1949-1990*. Berlin: Ch. Links Verlag.
- Lemke, Michael. 2001. *Einheit oder Sozialismus? Die Deutschlandpolitik der SED 1949-1961*. Köln: Böhlau.
- Lemke, Michael. 1999. “Der lange Weg zum „geregelten Nebeneinander“ – Die Deutschlandpolitik der DDR Mitte der fünfziger bis Mitte der siebziger Jahre”. in Christoph Kleßmann, Hans Misselwitz and Günter Wichert Hg. *Deutsche Vergangenheiten - eine gemeinsame Herausforderung. Der schwierige Umgang mit der doppelten Nachkriegsgeschichte*. Berlin.
- Ludz, Peter Christian. 1972. “Zum Begriff der „Nation“ in der Sicht der SED – Wandlungen und politische Bedeutung”. *Deutschland Archiv* 5, pp. 17–27.
- McKay, Joanna. 1998. *The official Concept of the Nation in the former GDR*. Ashgate.
- Niethammer, Lutz. 1999. “Traditionen und Perspektiven der Nationalstaatlichkeit für die BRD”. in Lutz Niethammer, *Deutschland danach. Postfaschistische*

- Gesellschaft und nationales Gedächtnis*. hg. von Ulrich Herbert und Dirk van Laak. Bonn.
- Pletsch, Carl. 1979. "The Socialist Nation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or The Asymmetry in Nation and Ideology between the Two Germanie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21, No. 3 (Jul., 1979), pp. 323-334.
- Przybylski, Peter. 1991. *Tatort Politbüro – Die Akte Honecker*. Berlin.
- Püschel, Dietmar. 1991. *Deutschland einig Vaterland. Hymne; Melodie mit Gesang*. Leipzig: Leipzig Musik.
- Ress, Georg. 1995. "Grundlagen und Entwicklung der innerdeutschen Beziehungen". in Josef Isensee and Paul Kirchhof Hg.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 Heidelberg.
- Ress, Georg. 1979. "Das Wiedervereinigungsgebot des Grundgesetzes". in G. Zieger Hg. *Fünf Jahre Grundvertrags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Schriften zur Rechtslage Deutschlands*, Bd. 1. Köln: Carl Heymanns Verlag.
- Reuter, Jürgen. 1991. *Die Abgrenzungspolitik der DDR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n siebziger und frühen achtziger Jahren*. Bonn.
- Roos, Sören. 1994. *Das Wiedervereinigungsgebot des Grundgesetzes in der deutschen Kritik zwischen 1982 und 1989*. Berlin: Duncker & Humblot.
- Rossi, Matthias. 2010. "Wiedervereinigung und deutsche Verfassung". in Brigitte Krulic and Bernd Zielinski Hg. *Vingt ans d'unification allemande. Histoire, mémoire et usages politiques du passé*. Frankfurt. a. M: Peter Lang.
- Säuberlich, Dietmar. 1984. "Die Diskussion der Gesellschaftswissenschaftler der DDR zum Verhältnis von Sozialismus, Imperialismus und nationaler Frage (1961–1962)". in *Zur Formierung der sozialistischen deutschen Nation – Forschungsbeiträge*. Berlin.
- Schmidt, Walter. 1996. *Das Zwei-Nationen-Konzept der SED und sein Scheitern. Nationsdiskussionen in der DDR in den 70er und 80er Jahren*. Berlin.

- Schweigler, Gebhard. 1973. *Nationalbewußtsein in der BRD und DDR*. Düsseldorf.
- Seiffert, Wolfgang. 1982. “SED und nationale Frage. Eine aktuelle Bestandsaufnahme”. in Wolfgang Venohr Hg. *Die deutsche Einheit kommt bestimmt*. Bergisch Gladbach.
- Spanger, Hans-Joachim Spanger. 1982. *Die SED und der Sozialdemokratismus. Ideologische Abgrenzung in der DDR*. Köln.
- Staad, Jochen. 1996. “Walter Ulbrichts letzter Machtkampf”, in *Deutschland Archiv* 29. pp. 687–700.
- Stelkens, Jochen. 1997. “Machtwechsel in Ost-Berlin. Der Sturz Walter Ulbrichts 1971”. in *Vierteljahreshefte für Zeitgeschichte* 45 (1997). pp. 503–533.
- Sturm, Peter. 2024. “Historische Parallele. In Nordkorea weht ein Hauch von DDR 1971”.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02.02.2024. (<https://www.faz.net/-gq5-blse2>).
- Weinert, Rainer. 1995. “Wirtschaftsführung unter dem Primat der Parteipolitik”. in Theo Pirker, M. Rainer Lepsius, Rainer Weinert and Hans-Hermann Hertle Hg. *Der Plan als Befehl und Fiktion*. Opladen.
- Wörterbuch der marxistisch-leninistischen Soziologie*. 1969. Berlin.
- Zieger, Gottfried. 1988. *Die Haltung von SED und DDR zur Einheit Deutschlands 1949–1987*. Köln.

Abstract

The Unification Abandonment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the Theory of Two Nations between 1967 and 1974

Lee, Dongki*

From 1967, GDR leaders began to abandon the prospect of a national reunification of Germany, believing that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German states had entered a new phase and that there was no possibility of political change within West German society. The SED leadership argued that the unification of socialism and monopoly capitalism was like mixing water and oil. The East German leadership's rejection of German reunification can be seen primarily as a result of disappointment with the stubborn attitude of the West German conservative government. However, it was also the result of a East German communist pessimistic perception of reality with regard to the "shift to the right" of the West German social democrats. The belief of the SED that reunification could be achieved through an alliance with the SPD, i.e. through the formation of a unified workers' solidarity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had completely disappeared. Only the strengthening of the East German socialist system was seen as a meaningful development for the German natio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completely distanced itself from West Germany and insisted on the two-nation theory, so that both countries had to go beyond the unification discourse in order to achieve peace. East and West Germany avoided conflict over reunification and national politics and were able to

* Prof. Dep. of Peace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ove towards a realistic peace process. In this process, East Germany secured de facto state recognition and respect in its relations with the West and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age. However, the paradoxical achievement of the peace process also led to the emergence of a strong democratic movement and opposition to the SED regime in the GDR. It was only after reunification that a new collective identity emerged in East Germany.

Key Words: unification abandonment, German unification, theory of two states, theory of two nations, socialist nation

논문투고일: 2024. 05. 01.

논문심사일: 2024. 05. 17.

게재확정일: 2024. 05. 26.